

경찰, 수사권 가져갔는데...수사 더디고 불신 커졌다

국감 자료로 본 경찰 부실수사 실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가 하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겉으로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을 입맛대로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력, 내로남불식 수사 관행에 대한 불신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더불어민주당 박완수(장원시 의창구)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17년 1366건에서 지난해 1679건으로 4년 만에 23%가 늘었다.

사건관계인의 경찰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정도 지난 2018년 2425건에서 2020년 3520건으로 2년 만에 45%가 급증했다.

광주·전남도 비슷해 2018년 178건(광주 80건·전남 98건)→2019년 204건(101건·103건) 등으로 늘었다.

사건관계인의 불신을 넘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 수사관 기피 신청 매년 증가세...검찰 재수사 요구도 늘어 수사기밀 누설·비위 등 올들어만 26명 징계...지난해보다 두배 증가 평균 사건 처리도 4년 전에 비해 광주 12일·전남 20일 가량 더 걸려

올해 1분기(1~3월) 광주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견줘 22.4% 감소한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어났다. 광주 경찰이 지난 1월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했던 1032건 중 17건만 재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은 2월 자체 종결(불송치) 사건이 743건으로 줄어들었음에도 2배 가까이 증가한 30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3월에도 1188건의 불송치 사건 중 25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었다.

보완 수사 요구도 67건(1월)→86건(2월)→125건(3월) 등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겉멋하면 '피의사실공표', 특하면 '개인정보침해'라더니=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경찰청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26명(광주 8명·전남 1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중 징계 경찰관 14명(광주 3명·전남

11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내세워 공인에 대한 수사, 송치 단계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게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알려진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당장,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경찰서 전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경찰청에서 목포서를 비롯, 5개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내려간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계획을 지인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부권 합동 단속팀 편성 및 동원 지시' 공문 내용을 파악한 뒤 불법 게임장업자에게 알려달라며 유흥주점을 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발설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B 경위도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B 경위는 수사 제보를 목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 뿐 아니다. 국민의힘 이영(비례)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처분현황을 분석, 광주·전남 경찰의 범죄행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성범죄·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 5명, 2017년 5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이었고, 올해도 3명의 광주·전남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6년 6명, 2017년 6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7명, 2021년 2명의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 기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찰은 3명에 달했다.

◇사건은 많고 수사는 늦어지고 수사형사는 없고=경찰의 사건 처리기간도 늘어지고 있다. 수사종결권을 갖게되면서 사건이 많아지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특정 부서로 몰리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장, 한 사건 처리에만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에서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광주경찰은 50.8일, 전남경찰은 62.4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청의 경우 2017년 43.2일→2018년 48.9일→2019년 50.4일→2020년 55.7일→2021년 62.4일로 4년 전보다 20일 가량 길어졌다. 하나의 사건 처리에 두 달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광주경찰청의 경우 2017년 37.4일→2018년 43.7일→2019년 43.5일→2020년 48.2일→2021년 50.8일로 늘어 4년전보다 12일 가량 늦어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로 가던 고소·고발 사건들도 전부 일선 경찰서로 배당되는 상황이라 처리할 사건은 쌓이고 복잡한 사건들도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수사가 피해자를 바람과 달리,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는가 하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경력자들의 비(非)수사부서 전출로 인해 전체 수사관 중 수사경력 1년 미만의 수사관이 1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하루하루 버티는데 율화통 터지는 '허위 주문'

광주 진월동 식당·마트 등 배달 갔다 허탕 잦아 속앓이 소액 피해에 수사도 어정쩡

광주시 남구 진월동 상인들이 허위 주문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도 소액 사건이라며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인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진월동 일대에는 지난달부터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허위 주문 전화가 잇따르면서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치킨집, 피자전문점, 중국집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을 골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음식 배달을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상인들은 공중전화인지 일반전화인지 모르고 주문 장소로 음식 배달을 나섰다가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치킨 전문점에서는 지난달부터 한달 간 무려 10건의 가짜 주문 전화로 30만원이 넘는 음식을 버렸다며 일반 전화번호만 뜨면 신경이 곤두설 정도다.

상인들은 가짜 주문 전화를 넣는 범인을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달 25일 밤 9시 20분께 인근 한 아파트 단

지 슈퍼마켓으로 순살양념치킨 2마리를 가져다 달라는 가짜 주문 전화를 비롯, 최근 한 달간 진월동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허위 주문을 넣은 여성을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교롭게 배달장소도 진월동 특정 아파트 단지 내 마트, 관리사무소 등에 집중되고 있다.

치킨집 주인 A씨는 "우리 가게 뿐만 아니라 진월동 일대 치킨집과 중화요리 전문점에 허위 주문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마트 주인도 "우리 마트에도 지난 추석 연휴에 배를 주문한다는 허위 주문전화를 공중 전화를 통해 2건이나 걸려왔다"면서 "이후에는 우리 가게로 하루 평균 3~4건의 치킨, 피자, 장어 등이 배달됐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주문량이 5만 원 안팎으로 비교적 많은데다, 가짜 주문을 받아도 3000원 안팎의 배달료는 지불해야 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 피해 상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 주문자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수사착수가 어렵다면서 피해를 당한 업주들이 사례를 한꺼번에 모아 신고하라고 해 돌아왔다"며 섭섭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성2동 자원봉사캠프 개소 6일 광주시 서구 동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성2동 자원봉사캠프 개소식에서 서대석 서구청장과 고은순 캠프장 등이 헌관 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징역 6년 구형

"공무원에 청탁 해줄게" 6억 받아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징역 6년이 구형됐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심재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 전 사장에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사장을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와 지

난 2019년 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사 등으로부터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받았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모 법인 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군산시 LED 가로등 사업 입찰 사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과 2020년 최 전 사장 회사 관계자 등에게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 최 전 사장 회사 관계자,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3년, 추징 4억3000여만~1억1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25억원 규모의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였다.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다 2018년 11월 사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